

##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가) ~ (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이고, 甲 ~ 丁은 그 권한을 가진 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아 확정된 [ (가) ]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였다.
- 乙은 甲으로부터 통보받은 [ (가)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 (나) ]에 관한 협의에 응하였다.
- 丙은 甲에게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 丁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 (다) ]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① 甲이 다른 법령의 개정예 따라 (가)의 용어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② 확정된 (나)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안을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丙이 통계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乙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丁이 단순한 문구 수정 등 (다)의 일부를 보완한 때에도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2.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 甲으로 하여금 乙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관리대상물자 B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甲은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乙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甲은 B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乙에게 미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④ 乙이 甲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3.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건설기계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X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자 甲에게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에게 송달된 고지서에는 품목, 규격, 수량 및 지정에 따른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인도·인수 장소는 그렇지 않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A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甲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ㄷ. 甲이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훼손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A의 노후화로 인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그 지정해제의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4. 중점관리대상업체 A 방송사 및 이에 종사하는 중점관리대상인력 甲이 참여하는 동시관리훈련이 2022. 3. 25. 1일간 실시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에게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 ② 甲이 2022. 3. 25.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대상이 된 경우에 예비군 훈련이 우선한다.
- ③ A의 장은 甲이 참여한 훈련기간을 휴무로 정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④ 훈련으로 인해 甲이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 실시하는 정부연습을 위해서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수량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장은 긴급한 경우에 정부 비축물자의 비축을 해제한 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 7. 대통령 甲, 국무총리 乙 및 행정안전부장관 丙 등으로 구성된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국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丙이 관계 주무부장관과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乙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 중 丙이 인정하는 사람은 비상대비 훈련을 면제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丙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丙이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乙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ㄴ. 훈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ㄷ. 시·도지사등이 발부하는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지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 ㄹ.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손괴·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사례의 설명으로 <보기>의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甲은 아버지 乙과 함께 군부대가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 甲은 위 훈련에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자신 소유의 값비싼 준설선(浚渫船)을 훈련대상물자로 제공하였고, 乙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乙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훈련 도중 거센 호우로 甲의 준설선이 전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

— <보 기> —

- 甲은 [ (가) ]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 [ (나) ]은 甲에게 준설선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甲의 준설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 (다) ]이다.
- 준설선에 대한 보상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 甲은 [ (라) ]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전몰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
②	순직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③	순직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④	전몰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②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에 포함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甲은 1990. 4. 20. 출생한 남자로서 2018. 2.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3. 외항선을 운항하는 B 해운회사의 선원이 되어 그 해에는 6개월 동안 승선하였고, 2022. 2. 5. 승선하여 같은 해 8. 31. 까지 승선하기로 되어 있다.
- 乙은 1996. 2. 10. 출생한 남자로서 2016. 3. 2.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2. 8. 졸업이 예정된 자이다.
- 丙은 1987. 7. 5. 출생한 남자로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다.
- 丁은 1990. 9. 10. 출생한 여성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C 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 <보 기> —

- ㄱ. B 해운회사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甲은 B 해운회사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 ㄴ. 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22. 4. 현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2. 8. 졸업하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 ㄷ. 법원행정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丙은 법원행정처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 ㄹ. 丁은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자가 아니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면 C 회사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문 14.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 대원 甲은 소속 기업의 해외파견으로 1년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ㄴ. 의료분야의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민방위 대원 乙은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 ㄷ. 교육훈련 명령자는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 丙의 결혼식을 이유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丙의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다.
- ㄹ.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 대원인 丁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교육훈련 중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의 동원명령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를 직접 할 수 있다.
- ②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응급조치권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차량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문 17. 다음은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규정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면·동장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① ㉠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에 포함된다.
- ③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운수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처리시설은 ㉣을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 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 ㄴ.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명령에 따른 주민의 피난을 방해한 경우
- ㄹ.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며,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구에 여러 개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하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중 연장자를 직장의 장으로 한다.

문 20.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같은 건물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ㄴ.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시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탁경찰서장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ㄷ.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 같은 직장이 같은 광역시의 군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지역에 있던 예비군대원이 결혼식을 이유로 동원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원명령 발령 후 3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사유가 없어지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일 이내에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X시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2022. 1. 25.(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소집일을 2022. 2. 27.(일)로 한 훈련 일정을 공시하였다. 이후 예비군대원 甲, 乙을 비롯한 X시 예비군대원들에게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준비하면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전달을 원하는 乙로부터 미리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았다.

甲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甲이 미리 선정한 수령인 丁에게 전달하였고, 乙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 일정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 丙은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 <보 기> —

- ㄱ. 동원에 대비한 점검을 하려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화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 ㄴ. 수령인 丁에게 2022. 2. 18.(금) 甲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다음날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소집통지서는 甲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 ㄷ. 乙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2022. 2. 22.(화)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면, 乙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ㄹ. 丙이 2022. 2. 23.(수)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면, 이 경우 丙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역 일대의 마을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멸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긴급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A 지역을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乙이다.

- ① 甲은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乙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甲이 무장공비의 소멸 작전에 지장을 주는 A 지역 주민의 축사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A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A 지역에 대해 내린 출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주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24.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한 후 동원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로 인하여 10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가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 ㄴ. 甲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80일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ㄷ. 甲은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료비용은 해당 의료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에게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회의 의장은 산업단지에 소속된 직장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방위협회의 의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 ④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문 26. 「예비군법」상 법정형에 의할 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군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ㄷ. 고등학교의 장이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
- ㄹ.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ㅁ.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어 훈련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의무가 있는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① ㄱ, ㄴ, ㄹ
- ②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구조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ㄷ.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ㄹ.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되었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가)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합동 안전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라)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정부합동안전점검단	1년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년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년
④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정부합동안전점검단	5년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비축·관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기·통신 기자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ㄴ. 시·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ㄹ.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장은 관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인접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보수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급한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 ③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점유자에게 그 선박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점유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31. A군의 군수 甲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2. 3. 1. 해당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물(乙 소유 및 거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긴급한 경우 乙에게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수 있고, 그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A군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③ 甲은 2022. 5. 29.까지 乙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乙은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문 32. A시의 최근 3년(2019 ~ 2021)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시의 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도 10억 원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A시의 장은 2억 1,000만 원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시의 의무예치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2021년까지 A시의 누적 의무예치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A시의 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작업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시의 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B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B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甲은 화재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甲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乙 및 아들 丙(18세), 어머니 丁이 있다.

— <보 기> —

- ㄱ. 지원을 요청받은 B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 ㄴ. A시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B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
- ㄷ. 甲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ㄹ. 丙은 甲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 지역에 A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 재난인 X사고가 발생하였다.

— <보 기> —

- ㄱ. X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A시의 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X사고로 발생한 B 지역의 피해가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다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B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ㄹ. X사고로 B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서는 2022. 1. 20. 호수가 많은 이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불꽃놀이 기획 전문업체인 B 회사가 개최자로서 호숫가에서 2022. 6. 30. 폭죽을 사용하는 불꽃놀이 축제를 30분간 진행하는 계획이 2022. 3. 15. 선정되어 지역축제 개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 <보 기> —

- ㄱ.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A시는 물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ㄴ. 만약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 ㄷ.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2022. 6. 16.까지 A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22. 6. 23.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은 물론,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B 회사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법령 I - 헌법

문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ㄷ.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은 위임조항의 수범자인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용부담금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되는데, 동법 제19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X
②	O	X	X	X
③	X	O	X	O
④	X	X	O	O

문 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5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 ③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 ④ 현행헌법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4.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②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만 치료감호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인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피청구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인 대통령에게 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한 추징판결의 집행이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문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통신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통신 이용 상황과 내용이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의하여 파악될 것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②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6.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③ 공적부조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국민 간에 소득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장애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외국인으로서 2013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A는 입국시에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단기 상용 목적의 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A에 대하여 입국목적이 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 B는 A가 타고 온 비행기의 운수사업자인 중국남방항공에 대하여 A를 국외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송환지시서를 발부하면서, 송환지시서에 “항공사 및 출국대기실에 난민심사를 위해 대기하여야 함을 고지함”이라고 부기하여 즉각적인 집행을 보류하였다. A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내에 설치된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고, A의 변호인 C는 2014년 4월 25일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A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A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A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 ② 헌법 제12조제1항은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형사절차만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 ③ 입국불허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을 뿐 외국으로 자진출국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자유가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송환대기실을 벗어나 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A는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 8.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으로 인하여 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 대통령이 감수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헌법 제54조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ㄹ.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2003년 3월 23일 청구외 B와 결혼하였는데, B가 2004년 5월경 임신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으면서 의사 C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는 「의료법」상 이른바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 10월 2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에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 ① ‘이 사건 규정’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② B가 2005년 2월 4일에 이미 아들을 출산하여 A는 그 성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A의 주관적 권리 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자기관련성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③ 태아의 성별에 관한 정보는 의료인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로서, 의료인이 진료결과 전반에 관하여 산모나 그 가족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제한한다.
- ④ ‘이 사건 규정’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문 1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ㄹ.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O	X	O	O
②	O	X	X	O
③	O	O	X	X
④	X	O	O	X

문 11.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주소와 거소 개념을 사용하는데,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거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거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제2항은 조세형평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라 할 것이다.
- ④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포함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문 1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1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국회에게 이 견해에서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총장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칙시정요구를 한 경우, 그 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의 권리·의무에도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이들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문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 1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자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③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